

“부안 사립여고 ‘성추행’ 발본색원 하라”

김승환 교육감, “수수방관 교직원·법인이사회도 철저히 감사… 중3 여학생 고교 선택권 가지도록 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부안 사립여고 교사가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인이사회를 포함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안지역 중3 여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교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했고 심지어 교무실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폭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의 관결이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돕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짓밟고 유린하는 흉기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파렴치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교감, 동료들은 도대체 뭘 했냐”라며 학교의 수수방관 내지 묵인을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된 것도 의심스럽다. 해당 학교법인은 채용과정에서 시정잡배를 교사로 만들었다. 이것이 사학의 자율성인가”라고 묻고 “감사 대상에 법인이사회도 포함시켜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안의 중·고교 구성을 보면 중3 여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고가 이 학교 한 곳 밖에 없다. 여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 사립학교가 마치 치외법권처럼 돼있었다”고 진단한 뒤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 선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 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혜훈(왼쪽 두 번째) 대표, 하태경(왼쪽) 최고위원, 정운천 최고위원, 김영우(오른쪽) 최고위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악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여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외압은 교육감이 다 막아내겠다. 이 사건을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성교육,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해은 기자

19대 대선 비용 총 1387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사퇴한 후보자의 소속정당 포함)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총 1,387억7,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히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개 정당이 1,251억 8,000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이 483억1,700여만원을 지출했고 한국당이 338억6,400여만원을 지출했다. 국민의당은 430억300여만원을 지출했다. 바른정당은 48억3,800여만원, 정의당 35억6,600여만원, 새누리당 10억2,8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선에 사용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이날부터 9월26일까지 3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뉴스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은닉 재산 ‘조사 중’”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반드시 바로잡겠다”

한승희 국제청장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종교인 과세 연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만큼 시기가 정해지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 등 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제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고액·상습채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

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제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고도했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를 진행한 적 있느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숨겨둔 400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인 흘러들어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세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은닉재산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심기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한 탈세 의혹,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

라”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러나는 혐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경련은 기부금을 면세 받는 (공익) 단체인데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 15곳에 3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설립취지에 맞느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못됐다.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2018년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 준비현황과 유예 가능성”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문 하자 “시행 시기에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기를 정해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자 “환경 요인, 다양한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

김광수 의원, ‘승강기 이용자 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6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다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바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바 우려가 커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양용모, 삼성 새만금 MOU 진상규명 요구 1인 시위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지난 26일 총리실 앞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양용모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지난 5월 19일 총리실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관계자와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를 LH 전박이전이 무산되는 시기에 총리실 주도로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장이 서명하고 정부(총리실) 책임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전북도의회 차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특위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26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추미에 “당청과 대통령,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야”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참여정부 시절 당청갈등을 언급하며 “이번만큼은 절대로 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같이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역균형발전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 초반에 지지 세력이 분열되고 당이 쪼개지고 하느라고 제대로 마음을 못 합치고 당청이 분리돼 서로 결별했다. 그래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